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Date of Release: 14 February 2025

FOR MORE INFORMATION

Seung-ho Choi, Foreign Press Spokesperson

TEL: +82-44-201-1120

E-mail: csh9731@korea.kr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4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1.1 공익직불제도, 수입안정보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찾아 가는 농촌 서비스’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공익직불금 개선

농식품부는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직불금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현재 연 3천 7백만 원)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완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농식품부는 재해 및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 대응을 위해 2024년 고구마,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올해 9개 품목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벼·가을배추·가을 무 등 6개 신규 품목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재해보험은 보험료 할증·할인 제도를 개선하고,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과수 4종에 대한 종합위험(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보장도 강화된다.

할당관세 적용 및 용자지원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 수입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비료·사료 등 공급업체들의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공동구매, 계절근로자, 찾아 가는 농촌 서비스

동일선박을 통한 공동구매 수입은 2024년까지는 사료에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에는 비료 등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약 6만 7천 명으로 확대한다.

의료, 생필품 판매·배달, 교통 등 ‘찾아 가는 농촌서비스’를 교육·돌봄 등으로 확대한다.

1.2 농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산물 수급관리

농산물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신규 농산물에 대한 자조금을 도입한다. 농산물 수급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에 예비묘 및 약제할인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 비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기제어(CA: 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채소류를 적기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물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한우 사육기간을 현행 30개월보다 줄인 단기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사육 한우에 대한 별도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축산물 온라인 거래량을 2천 8백 억원까지 확대한다.

1.3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밸류체인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위성 및 드론을 통해 농업 예·관측 역량을 고도화하고,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를 확대한다. 사과는 신규 산지를 육성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을 시범 재배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1.4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대한다.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확대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농식품부와 대학교 공동 지원으로 대학생들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하여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1.5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한식과 식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한다.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허가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소규모 식품·외식기업, 청년 외식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농산물 원료 매입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한다. 또 K-미식벨트 확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국제 미식행사를 개최하여 한식과 식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한다. K-미식벨트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한식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과 관광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2.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2.1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농지의 활용 확대

농지는 그간 경작지, 온실 등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2025년에는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예: 수직농장, 주차장 등)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 가공업,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여 농지의 활용을 다양화한다.

농지 임대차 및 농지관리제도 개선

농지 임대차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지만, 농업 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2 쌀 과잉 생산 방지, 고품질 쌀 생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지자체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쌀의 단백질 함량표기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략작물이란 이러한 목적으로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예: 밀, 옥수수, 가루쌀 등)을

말한다. 2025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2.3 농업경영체를 혁신경영체로 전환하고 귀농·귀촌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공동영농 촉진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공동영농이란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공동 농작업을 하거나 농지를 공동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동영농 모델을 (a) 농작업 위탁형(일반적 형태), (b) 위탁+임대 혼합형, (c) 임대형, (d) 주주형 4가지로 유형화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 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가공, 유통, R&D 등 농산업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 청년 지원 확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금(정착자금),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10개 단지를 추가로 증설해 27개 단지로 늘린다.

2.4 농촌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되고 농촌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농촌 입지규제 완화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산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재정 및 펀드 투자를 지원한다. 또 5개 선도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규제 특례 범위를 설정 및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 인프라 확충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 조성한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의 관광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 제공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목적은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도3촌’ 시대를 여는 데 있다. 또 빈집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재생을 확산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3.1 2025년에는 온실(약 55천 ha)의 2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의 외연을 확장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지,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스마트팜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농업 기자재 국가표준을 도입하는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용 드론·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에 대한 R&D 및 실증을 추진한다.

3.2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 확충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및 스마트공장

푸드테크 시장이 식품 로봇·식품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24)에서 5개소('25)로 늘리고, 민-관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도 30개사('24)에서 70개사('25)까지 확대한다.

푸드테크란 ‘음식’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과 관련하여 AI, IoT,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생산·제조·유통·배송 등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총체적인 벨류 체인에 적용하는 新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의 예로는 요리 로봇, 서빙 로봇, 음식 배달 로봇, 대체육 등이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 확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선정해 연구·생산 거점을 추가 확충한다('24: 11개소 → '25: 12개소). 또 4백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3.3 미래 신산업에 대규모 R&D 투자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고성장 新산업에 1,088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한다. 또, 현장 수요가 많은 기술(예: 축산환경 개선, 농업기계 R&D 등), 중장기 현안(기후변화, 농촌소멸 등) 해결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중장기('25~'29)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100억 원 규모의 농산업 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해 민간이 제안한 新산업에 투자한다.

3.4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K-푸드 플러스(K-푸드+)란 농식품에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 의약품 등)을 더한다(+)는 개념이다. 농식품은 해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중소도시(2선 시장) 중심으로 K-푸드 플러스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10대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의 프리미엄화(포도, 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K-푸드 수출박람회 등 대규모 마케팅(라면)을 지원한다. 10대 수출 품목에는 파프리카, 포도, 딸기, 배,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가 있다.

스마트팜 수출의 경우,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4개('24)에서 6개('25)로 늘리고 기술력 입증에 위한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4.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 모델 구현

4.1 동물복지제도 및 동물복지 인프라 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동물복지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동물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특수목적견 등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87개소('24)에서 102개소('25)로 늘리고 동물보호인력도 확충해 나간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확대

동물의료 및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연관산업을 다양화한다. 또 동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표시, 영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영업범위를 확대한다.

4.2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친환경 농축산업 인프라 확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농업활동을 장려하여 탄소 발생을 줄이는 정책이다. 해당 농업활동에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이 있다. 2025년부터는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등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업 분야 ‘탄소 크레딧’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가축 분뇨 등 지역 부존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